

# 개인의 데이터 사용할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 경제 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 「윤리적 추론」과 「고정소득증권」강의페어링

금융공학과 4학년 201022045 김영균, 이진희 교수님 지도

### 목적

빅데이터 기술은 정치, 과학, 경제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다.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페어링을 통해 빅데이터가 가져올 문제 중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윤리적 추론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지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 『고정소득증권』과 빅데이터

고정소득증권 강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채권으로 다른 금융상품들의 기능을 복제하는 방법을 다룬다.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들은 전통적인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시장의 지수(ex. NASDAQ), 일반상품(ex. 금)과 같은 정치, 사회현상, 개인들의 심리적인 영향 등 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빅데이터는 이미 금융에서 ‘핀테크’의 이름으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으며,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빅데이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데이터기술 사용권한에 대한 『윤리적 추론』

빅데이터 분석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문제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빅데이터가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능력을 근거로 부여될 수 있는지 추론한다. [윤리적 추론]강의교재 [윤리적 사고와 논리]의 저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원칙, **‘인격존중’, ‘공정성’, ‘규칙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위 논제가) 정당화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한다.

### 데이터기술의 활용

#### 개인의 기호에 맞춘 Microtargeting

소비자, 유권자, 또는 잠재수요자의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개인의 기호에 맞춰 상품, 선거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캠프가 개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맞춤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빅데이터 기술은 소비패턴이나 생산량 등을 분석, 활용함으로써 생산량 극대화, 유통기간 단축, 적재적소에 배분 등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예로, 알리 익스프레스는 지역별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중국 전 지역 1일 배송을 실현했다.

#### 미래 예측

과거의 데이터들로부터 귀납 추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은 의료, 범죄 및 재난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위와 같이 데이터 기술들은 개인과 사회에 많은 편익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들은 경제체제 변혁을 유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윤리적 추론\_윤리적 원칙

1.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라.  
모든 윤리적 행동의 필요조건이 되는 원칙. 단지 인격이라는 사실에 의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와 인격으로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
2. 모든 인격을 **공정**하게 대우하라.  
모든 인격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들을 부여하는 원칙.
3. 1, 2와 일관적이면서, 영향을 받게 될 **다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 규칙**을 채택하라. **[규칙 공리주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규칙을 선택하는 공리주의원칙  
위 원칙들 중 ‘인격존중의 원칙’과 ‘규칙 공리주의 원칙’을 주로 이용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윤리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 정당화 실패

인격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행위는 인격 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점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 및 활용되는 것은 인격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량적인 정보만을 내포하지만, 개인에게 귀속된 개인의 소유물이다. 이런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개인의 정량적인 정보, 개인의 극히 일부분을 함축한다.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데이터가 개인의 기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실재하는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이며, 개인에게 귀속된 데이터의 지위와 실재하는 개인의 지위를 역전시키는 행위이므로 인격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

빅데이터 기술은 정부나 대기업과 같이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용할 경우 선동이나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 예로,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정책은 증세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비판의 근거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확보와 흡연율 변화’를 예측한 데이터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조종하려는 독재적 정책이다.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집단이 데이터 기술을 악용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의 ‘공공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확장하여,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계획경제는 자원배분 최대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데이터기술에 기반한 계획경제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 규칙을 선택해야 하므로 계획경제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

###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계획경제의 부활?

“2030년 세계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놓고 대논쟁을 다시 벌이게 될 것이며, 계획경제가 더 우월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데이터를 쥐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IT시대가 저물고 DT시대가 올 것이다.” – 알리 바바 마윈 회장 인터뷰 중

데이터 기술진보는 계획경제체제의 도래를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가 큰 만큼 개인과 사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며, 특히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가지려 할 것이다. 독점적인 영향력을 갖는 집단은 개인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마케팅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수정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문제

-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이용
- 데이터화 된 개인의 지위와 실재하는 개인의 지위 역전
- 정책, 마케팅을 악용한 선동과 독재
- 예측기술에 의한 불확실성 제거노력과 계획수립이 유발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

### 참고문헌

- 휴 머서 커틀러, [윤리적 사고와 논리], 맹주만 김진형 역, 철학과 현실사, 2009
- 프리드리히 A하이에크, [노예의 길], 김이석 역, 나남출판,
- 김지연, [빅데이터의 주제- 디지털 시민의 구성], 비판사회학회, 2015
- 동성혜, [빅데이터의 정치적 유용성-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 분석], 경기대학교 정치법학과 석사논문, 2014

